



탄압을 넘어 새로운 87년을 기획할 때

더 많은, 더 넓은 민주노조를 만들자

민주노조를 뿌리 뽑겠다는 박근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은 노조법이 아닌 특별법 상의 노조인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지만, 조만간 노조법 적용 노동조합들도 손을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의 이념적 잣대로는 민주노조의 강령들은 모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심지어 박근혜 식 노조법 해석에 따르면 노조 아닌 단체를 가맹 단위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설립 취소할 수 있다.

두번째 노동자대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조는 지금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를 당당히 총투표로 결정했고, 가스 와 철도 등 민영화 절차가 진행 중인 노조에서도 파업을 준비 중이다. 몇 년째 제 자리인 비정규직 대책에 학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건설노조 역시 자본의 반격을 격퇴할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아무리 정권의 탄압이 드세다지만 우리 민주노조는 싸울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투쟁을 조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투쟁과 함께 놓

치지 말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자본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현 조직노동의 투쟁이 조직노동의 투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의 조직화로 이어지는, 바로 투쟁의 확장성이다.

앞으로 탄압은 보다 집요하고, 근본적 일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민주노조 역시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노조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직 노동의 완고한 투쟁과 동시에 새로운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이 과제를 70만 조합원이 모두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조가 조직화를 통한 확장 가능성 정도에 따라 정권과 자본의 탄압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87년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70만 조합원, 또 다른 70만을 조직하자

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전조합원 70만이 뭉쳐 또 다른 70만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하자.

모든 산별노조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선언한 200억 조직화 기금마련을 함께 결

의하자.

금속노조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삼성전자에 민주노조 깃발을 세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전자산업 40만 노동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자. 이처럼 산별노조들이 강력한 투쟁과 함께 조직

화 태세를 갖춰야 한다.

민주노조가 탄압 자체의 방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옹호를 위해 조직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시기 1천8백만 노동자가 민주노조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다.

노동자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다시 세우자

서구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었다.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시민이었다. 하지만 18세기 말부터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했고, 현재와 같은 민주적 제도들을 발전시켜나갔다.

지난 11월 5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통진당의 강령과 행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란. 법무부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가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

법무부는 솔직했다. 다시 3백년 전으

로 돌아가 노동자는 온전한 시민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노동자가 권력을 잡는 것이 불법이란 것이니, 노동자가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없단 말과 같다. 투표할 수 있으나 권력의 주인은 될 수 없는 시민은 온전한 시민이 아니다.

노동자를 민주주의의 전위투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선두에서 싸운 계급이 노동자란 것이다. 정부의 선언과 반대로 시민 중의 시민은 노동자였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박근혜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노동자다!

지금 전교조 투쟁에 필요한 것은

다음 주 중으로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된다. 지금 전교조에 필요한 것은 다시 투쟁을 강화할 전술과 법외노조 시기를 대비할 장기적 계획이다.

조합비 CMS 100% 전환

조합비 CMS 전환이 벌써 80% 가까이 이뤄졌다. 투쟁기금도 쌓이고 있으며 각 지역은 신규 조합원의 가입소식으로 들썩인다. 이 싸움은 박근혜 정권 기간 내내 이어질 장기적 싸움이다. 조직의 인적·재정적 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한 핵심 과제다.

정권을 타격할 전술

전교조 전체 차원에서 박근혜 정권을 타격할 구체적 투쟁계획이 마련되어

야 한다. 먼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임자 현장 미복귀 선언을 하고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설립취소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면서 현장의 실천과 전국적 투쟁전선을 긴장감있게 연결시켜야 한다.

6만 조합원이 천명하는 참교육 선언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와 참교육의 문제의식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친일 교과서 문제, 부유층만을 위한 자사고·특목고 문제 등 교육 파행에 맞서 학교의 변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전교조 활동의 사회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6만 조합원들의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분회 및 지회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간 결속을 높이며, 지역공대위와 연계한 촛불집회 등 각종 지역연대사업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외노조 시기의 장기적 계획

나아가 겨울방학부터는 법외노조 시기의 전교조 운영 및 사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설립취소에

대응하는 대정부 투쟁과 현장 투쟁 및 참교육 실천을 강화하고 결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비롯, 이후 정치일정에 대한 대응방향 역시 주요한 고려사항이다.

비단 법외노조라는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전교조 운동 내에서 지적되어 온 여러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맞서 싸우자

박근혜 정부가 시간당 임금과 사회보험에서 차별을 없애고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양질의 시간제, 불가능하다

한국은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아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잔업·특근을 통해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는 상황이다. 시간당 임금의 차별을 없애도 적은 시간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져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애써 4대 보험에 가입해도 은퇴 후 연금액은 매우 적다. 한국은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제 노동자는 노후에 심각한

빈곤으로 내몰릴 것이다.

여성을 영원히 반쪽짜리 노동자로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 일자리로 고착되면 여성의 자립은 더욱 어려워진다. 반쪽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주 생계소득자인 남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혼이나 사별로 남성부양자를 잃은 여성은 생계불안에 시달린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일-가사 양립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이미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에 허덕이는 여성들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반쪽짜리 임금을 받으며 가사노동과 양육, 돌봄노동까지 하라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산 막아내자

우선 노동조합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고용률을 속이려는 정부의 정책

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이미 시간제로 일하고 있거나, 정부가 집중적으로 시간제를 확산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조직화를 준비해 시간제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부 정책에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을 빌미로 근기법 개악?

지난 10월 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행정해석만 바꾸면 된다

그러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데 굳이 근기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기법은 이미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12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의도적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68시간까지 초과근로를 가능케 했고, 이런 탈법적

행정해석을 고집해왔다.

속내는 근기법 개악

행정해석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도, 정부는 굳이 근기법을 개정하려 한다. 이번 당정 합의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빌미로 노동유연화를 심화할 근기법 개악을 하려는 것이 정부와 자본의 의도인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맞선 민주노조 운동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 소책자

고용률 70%의 불편한 진실

근로시간 단축과 동반되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고용률 70%'라는 이름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률 70%의 불편한 진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운동의 대안을 모색합니다.

가격 3,000원 문의 02-778-4001 이메일 pssp@jinbo.net

파업투쟁 승리!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자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투쟁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1일 3시간 경고파업 이후 11월 11일 하루 전면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은 없다! 헌법 제33조는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첫째, 용역업체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더라도 원정인 인천공항공사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 아니다. 둘째,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경비대는 법률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부정된다. 셋째, 소방대, 탑승교 등은 필수유지업

무여서 조합원의 10~40%만 파업이 가능하다. 넷째, 원정인 인천공항공사는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 용역업체에게 해당인원의 교체(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파업을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진행하고 있다. 온갖 탄압과 해고를 무릅쓰고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한국사회의 구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부정된 전체 비정규직의 희망을 위해서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민주노총과 사회운동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학교비정규직 파업투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적인 파업투쟁을 기획하고 있다.

작년 파업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파업이었다면, 올해는 단체협약안과 임금요구안 쟁취를 목표로 하는 파업이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는 사용자성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거부에 대한 벌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면피성 교섭에 나서고 있는 각 사·

도 교육청과 2,500원 호봉제로 학비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이번 파업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대정부 교섭을 벌이고 있는 학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별 노조의 교섭투쟁이면서, 여성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여성적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투쟁이다.

노동자·사회운동은 이번 학교비정규직 파업 투쟁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연대를 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민영화 저지! 원격의료보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단순히 생각할 때, 원격의료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막상 원격의료의 의학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면 진료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도 높지 않다.

원격의료 추진의 진짜 의도

새누리당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이것이 삼성전자, SK 등이 참여하고 있는 IT전자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사업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재벌에 의해, 재벌을 위해 추진되어 왔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재벌병원으로 진료의 독과점이 더 심해지고,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더 늘어난다. 그 돈은 고스란히 재벌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건 공공의료다

정부는 오지의 환자들을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은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 같은 나라가 아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문제는 공공의료 확대가 답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과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전향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교도소,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관에서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는 원격의료를 위한 실험대상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제공해 믿을 수 있는 의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 맞춤형 억제전략,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까?

올 상반기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드리워졌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야기하며, 북핵 발사 전과 후에 각각 이를 제어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5조 2,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위협을 빌미로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드러난 선제공격의 의지

킬 체인과 KAMD는 북핵 위협의 상황을 '위협-사용임박-사용'의 3단계로 나누고, 사용임박 단계 이전에 핵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 대한 위협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협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직접적인 군사적 압력은 북한의 대응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미국 MD체계 편입의 사전과정

'맞춤형 억제전략'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 발사된 핵·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는 정보망과 장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을 위한 사전과정이 될 위험이 있다.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여기는 미국의 MD 체계로의 편입은 동아시아 전체를 끊임없는 군비경쟁으로 몰아넣으며 평화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추악한 진실

노동자 착취, 소비자 우롱, 재벌만 살찌우다



2013년의 전태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故최종범 조합원이 남긴 유서에서 우리는 죽도록 일하며 열심히 살아온 서른셋 젊은 청년을 '배고파서 못살게 만든 슬픈 현실을 읽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평화시장 동료들의 인간다운 삶을 바라며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처럼 그도 유서에서 동료들의 삶을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는 노동조합을 '우리에게 생긴 힘'이라 불렀다. 가족과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노동조합 이야기를 했으며, 늘 앞장서서 활동하는 열성적인 조합원이었다. 그의 삶은 말하고 있다. 자신의 죽음을 절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1970년의 전태일과 2013년의 최종범의 죽음이 같다는 사실을 비통해하는 데 그치지 말자.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자. 우리 모두가 전태일과 최종범이 되어 삼성자본과 제대로 싸우자.

삼성전자는 국내 최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품질의 A/S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최저로 낮추기 위해 A/S부문 외주화를 시행했다. 더불어 엔지니어들의 고강도 감정노동을 동반한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고객평가 기반의 페널티제도와 무노조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와중에 삼성전자의 서비스부문을 삼성전자서비스(주)로 법인 분리하며 이러한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삼성전자 모바일부분 판매가 급속도로 성장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저비용-고품질 서비스로 인한 노동착취가 극에 달했다.

노동자 착취, 소비자 우롱

삼성전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중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위장도급업체로 이어지는 불법적 2중 하청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절감을 이뤘다. 만약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켰다면 삼성전자는 2012년에 연 1조원 가량의 임금을 더 지출했어야 했다. 즉 그만큼을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았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는 고품질 A/S를 이유로 국내 휴대폰과 가전의 가격을 해외보다 높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삼성전자와 관련업계 보도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소비자 A/S비용으

로 제품가격의 10~20%를 책정하는데, 국내에서만 이 돈이 약 3조 5천억원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A/S를 전담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지불한 돈은 6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비자에게는 A/S비용을 이유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은 빼앗아 삼성전자는 이중으로 부도덕한 이윤을 취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건물도 제대로 없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다. 삼성전자는 3조 원에 육박하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왔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

삼성공화국을 바꾸기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선포한 "삼성과의 전쟁"은 당면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삼성공화국을 뒤엎기 위한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75년 삼성 무노조 신화를 깨자

노동자운동은 그동안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인 삼성자본에 맞선 투쟁을 제대로 벌이지 못했다. 간헐적, 국지적인 조직화와 투쟁이 있었지만 확산되지 못했다. '삼성에서는 안 된다'라는 공포심도 남았

다. 노동을 극도로 몰아붙이며 이익을 최대한으로 쥐어짜는 무노조 전략의 심장을 겨누지 못하면서, 무려 75년 동안 삼성의 계열사와 하청사 뿐만 아니라 여타 대기업들에 이러한 전략이 확산되었다.

때문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의 의미는 크다. 출범 이후에도 조합원을 1500명까지 확대했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 내부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은 이전과는 크게 다른 조건이다. 이제 삼성 내부 곳곳에서 투쟁의 주체를 만들어내는 조직화 전략

이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삼성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힘을 모으자

삼성권력은 경제·정치·법에 걸쳐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다. 상대에 맞는 투쟁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적 옹호와 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삼성에겐 좋은 것이 국민에게 좋다'라는 지배적 인식을 바꿔내야 한다. 다양한 방면에서 투쟁을 기획-조직해야 하며, 삼성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너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민주노조 운동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전환점을 반드시 승리의 발판으로 만들자.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합니다.



블로그 : slw.co.kr
페이스북 : 삼성노동인권지킴이